

부릉 대신 따르릉... 친환경 전기자전거, 혁신 이동수단 부상

전기자전거 시장 매년 30% 이상 성장
배송 등 생활물류 플랫폼 활용 증가
헬멧의무착용 규제 벗어나 편의 ↑

마이크로 모빌리티(친환경 동력을 활용하는 소형 이동수단) 한 축인 전기자전거가 급부상하고 있다. 친환경인데다 기동성도 높아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헬멧이 의무 착용인 반면 자전거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자전거를 찾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측면도 있다. 일각에선 물류 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전기 및 공유자전거 업체 알톤스포츠 올해 1분기 매출액은 117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 90억원 보다 3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2억2000만원에서 올해 21억원으로 850% 뛰었다.

지난 3월 키움증권이 발표한 기업브리핑을 보면 국내 전기자전거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다. 특히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지고 코로나 19에 따른 출퇴근용 및 배달용 전기자전거 수요가 늘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알톤스포츠 전기자전거 매출액도 2019년 100억, 2020년 130억에서 2021년에는 163억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왼쪽)와 김충섭 김천시장은 지난 5일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브리핑에서 3륜형 전기자전거인 '카고 바이크'를 시승하고 있다. /경상북도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의 공유 전기자전거로 2019년 성남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1만대 규모가 운영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헬멧 의무 착용'이라는 규제에서 일부 반사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다. 데이터 분석 업체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보면, 자전거는 전동킥보드 보다 낙폭이 적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됐던 6월 지쿠티, 빙빙 등 주요 전동킥보드 업체 이용자 수는 5월 보다 최대 4만명 가까이 이용자가 수가 빠졌다. 반면 공유자전거 따릉이는 5000명이 줄었다.

◆전기자전거, '친환경 배달 수단'으로 키운다

알톤스포츠는 지난 16일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 스타트업 무빙(MOOVING)과 손을 잡았다. 친환경 배송 수단으로서 전기자전거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서다. 양사는 배달용 전기자전거가 국내 라스트마일(last mile) 시장에서 확산

할 수 있도록 실증·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실제 탄소 배출량에서 친환경적이다. 여행 및 운송분야 기업 루프트한자 이노베이션 허브(Lufthansa Innovation Hub) 자료를 보면, 전기자전거 1km당 탄소 배출량은 16g으로 자동차 208g의 8% 정도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92g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다. 친환경과 물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전기자전거가 해결해주는 셈이다.

정부도 전기자전거를 활용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일 경북을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경북에선 1톤 트럭 대신 삼륜전기자전거로 배송하는

모델을 실증한다. 자전거도로에서 이용할 수 없었던 삼륜전기자전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연간 이산화탄소 7.7톤을 배출하는 1톤 디젤트럭을 삼륜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배송수단으로 대체해 탄소중립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물류 플랫폼에서 전기자전거 활용도가 커진 것이다.

◆'카카오 T 바이크'... 교통 사각지대 메운다

모빌리티 분야의 강자 카카오모빌리티(카모)도 전기자전거 분야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내놓은 '2020 카카오 모빌리티 리포트'(리포트)를 보면, 카모가 서비스하는 '카카오 T 바이크' 이용 횟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대당 이용 횟수는 월평균 약 27%, 이용자 수는 35% 증가했다.

'카카오 T 바이크'(바이크)는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의 공유 전기자전거로 2019년 성남과 인천에서 처음으로 선보였다. 전국 12개 지역 총 1만대 규모가 운영 중이다. 카모는 바이크를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이동 사각지대를 메우는 라스트마일 모빌리티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자전거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실제 리포트에 따르면,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는 전주와 울산에선 전기자전거 이동 네트워크가 도시 전역에 걸쳐 펼쳐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민은 전기자전거를 보조적인 역할이 아닌 주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플랫폼을 앞세워 인프라 구축에도 뛰고 있다. 지난 4월 카모는 전동킥보드 '쌍쌍'을 운영하는 피오엠피와 '지쿠티'를 서비스하는 지바이크와 업무 협약을 맺었다. 배터리와 충전 인프라 등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를 공유해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PM)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김순복 기자 sunbok@metroseoul.co.kr

정부 지역경제 지원 정책

내년 지역상권법 시행... 임대료 갈등 막는다

상권 특성 따라 상생-자율구역 분리
지방세 감면, 용자 혜택 등 지원

비싼 임대료 때문에 상인들이 내몰리는 것을 막고, 스러져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상권법'이 내년 4월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대 국회 회기인 2016년 당시 발의됐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상권법은 오는 27일 공포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한다.

지역상권법은 지역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해 상인과 임대인이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를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제 감면, 재정 지원, 용자 등 특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역상생구역은 상권이 활성화돼 임대료가 상승하는 구역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통해 ▲상권 발

<지역상권법 세부 내용>

구분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
구역특성	임대료 급상승 지역	상권 쇠퇴한 지역
요건	상업지역 50% 이상 일정수준 이상 점포밀집	
특례조항	상생협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임대료 인상 제한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지원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② 상가건물 소유자에 대한 건물 개축, 대수선비 등 용자 ③ 상인 활성화구역 입주자 시설설비 운영비 등 용자 ④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비 등 보조 	

/중소벤처기업부

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법 범위(5%)내 임대료 인상 ▲임대차 기간등을 정해 임차인의 내몰림을 막는 등 지속가능한 상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자율상권구역은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도해 상권을 육성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온누리 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로 돕는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은 상인, 임대인, 토지소유가 각각 3분의2 이상의 동의와 시·군·구별 공청회를 거쳐 광역 지자체의 지역상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에서 지정한다.

두 구역 모두 지방세 또는 부담금 감면, 대수선비 및 시설비 등 용자,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권철승 중기부 장관은 "지역상권법 시행에 맞춰 부처의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지역중소 육성·혁신 지원 법적근거 마련

지역중소기업법 국무회의 통과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근거법이 마련,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과 지역균형뉴딜 등 경제·정책환경이 바뀌었고, 지역에서 한 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지역중소기업들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해 이참에 별도의 법을 만든 것이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중소기업의 정의와 정부 및 지자체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각 시·도 관할구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되,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선 우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공기관, 공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지역중소기업들의 혁신을 위한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해 지역중소기업육성 및 혁신촉진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지역의 거관계망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을 의미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등 지역의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 등 정부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스마트 혁신지구'는 낙후된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특례 제공, 기업 유치, 기반시설과 공동활용 인프라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올해 하반기 스마트 혁신지구 2곳을 선정해 지역중소기업 간 공동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플랫폼 구축 등을 지원한다.

공단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지원수시 모니터링, 긴급지원 등을 시행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별도의 법률체계가 없어 한계를 겪었다"면서 "앞으로 지역 단위의 위기 발생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등 효과성이 높아지고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와 지역별 정보시스템 구축, 전문연구기관과 전달기관 설립 등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각종 인프라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